

해방정국 정치지도자들의 사상과 행동: 한국 정치 이념의 모색



일시

2000년 9월 2일(토)

장소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

주최 : 한국정치학회
후원 : 고하 송진우 선생 기념사업회

古下 宋鎮禹의 활동과 정치이념

심지연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1. 머리말

한국현대사, 특히 해방정국에서 古下 宋鎮禹는 극히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한 연구는 아직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¹⁾ 송진우는 교육, 문화, 언론, 정치 등 각 방면에 걸쳐 많은 영향을 미쳤지만, 그의 일생이 동아일보 사주인 仁村 金性洙와는 일신양면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밀착되어 있었던 데다가²⁾, 해방 후의 활동기간이 매우 짧았기 때문에 그에 관한 연구는 소홀한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송진우와 김성수 두 사람의 활동과 이념이 아무리 겹치는 면이 있다고 할 지라도 각각은 별개의 존재일 수밖에 없기에 이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분리하여 검토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럴 경우에만 두 사람의 활동과 이념이 보다 선명하게 부각될 수 있고 오늘날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측면과 그렇지 않은 면이 구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송진우는 시대적으로 급격하게 변하는 시기를 세 차례나 겪은 인물이었다. 따라서 그의 생애도 자연적으로 세 시기 즉 성장기, 일제시대 그리고 해방 이후의 시기로 나눌 수 있는데, 각각의 시기는 나름대로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는 성장하면서 일제의 수탈과 침략에 의해 봉건 조선왕조가 몰락해 가는 것을 지켜보았으며 일제시대에는 어엿한 청장년으로서 국권을 잃은 조국을 구하기 위해 문화운동에 앞장섰으며 해방 후에는 정부수립을 둘러싸고 혼란한 이념투쟁의 와중에서 민주주의의 구현과 정착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했던 인물이었다.

송진우의 생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그가 본격적인 정치활동에 나서는 해방 직후라고 할 수 있다. 비록 그는 4개월 여의 짧은 기간밖에는 활동하지 못했지

1) 고하 송진우에 관해서는 古下先生傳記編纂委員會(編)에서 『古下宋鎮禹先生傳』(東亞日報社, 1965)이라는 제목으로 전기를 출판했고, 이를 토대로 하여 동아일보사에서 1990년에 ‘古下 宋鎮禹全集’을 출간하여 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모두 3권으로 구성된 전집의 필자와 제목은 다음과 같다.

金學俊, 『古下宋鎮禹先生評傳: 민족주의 언론인·정치가의 생애』(東亞日報社, 1990).

古下先生傳記編纂委員會(編), 『獨立을 향한 執念: 古下宋鎮禹傳記』(東亞日報社, 1990).

古下先生傳記編纂委員會(編), 『巨人의 숨결: 古下宋鎮禹關係資料文集』(東亞日報社, 1990).

2) 白芡, “東亞日報社長 宋鎮禹氏의 面影,” 『彗星』(1931년 3월), 111쪽.

만 그가 다진 터전 위에서 한국민주당이 성장했고 동아일보가 복간되었으며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는 우리의 현대사에서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사건들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는 물론 송진우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리더십에 기인한 바 컸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에 그의 사상과 활동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해방 후 활동했던 기간이 너무나도 짧았기 때문에 고하는 자신에 관한 기록을 거의 남기지 못하고 말았다. 일제시대 집필한 몇편의 글이 전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는 거의 저술을 하지 않았는데 해방 후에는 바쁜 일정으로 더욱 그러했다. 비록 자유로운 분위기였다고는 하나 자신의 사상과 이념을 정리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분주한 나날을 보냈기 때문이다.

2. 해방정국에서 고하의 활동

해방 직후 일단 정세를 관망하던 고하 송진우는 미군의 상륙이 임박해지자 본격적인 정치활동에 나서게 되며 그 일환으로 국민대회준비회를 결성했다. 그리고 이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한민당의 결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동아일보의 복간에 힘썼다. 고하가 초기에 정세를 관망함으로써 우익진영은 정국의 주도권을 좌익진영에 잃게 된다. 그러나 고하의 주장으로 한민당은 미군과 협력관계를 맺음으로써 열세를 극복하고 정계의 중심으로 부상할 수 있게 되었다.

1) 정세 관망

독일의 항복을 전후하여 고하는 동아일보 전 편집국장으로 있던 설의식(薛義植)이나 일본 외무성 사무관으로 있던 장철수(張徹壽)로부터 세계정세와 각국의 동향에 관해 어느 정도 알 수 있었다. 이들이 제공한 정보와 정세분석으로 그는 머지않아 일본이 패망하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³⁾ 이처럼 일제의 패망을 예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고하는 해방을 맞이하기 위한 적극적인 준비업무에는 나서지 않았는데 이는 일제의 감시와 감독으로 행동의 자유가 극히 제한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병을 핑계하고 두문불출하면서 세월을 보냈다.

이러한 관망적인 자세는 해방이 되어도 계속되었는데 정계참여를 권유하는 주위 사람들에게 그는 정세를 관망할 것을 당부했다. 일제가 물러가지 않고 있으며 연합군이 아직 상륙하지 않았으므로 경거망동해서는 안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리고 연합군이 들어오기 전에 일본 사람의 손으로부터 정권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총독부가 치안유지업무에 협조해 줄 것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끝까지 거절했다고 주장했다.⁴⁾

3) 金學俊, 『古下 宋鎮禹先生評傳 : 민족주의 언론인·정치가의 생애』, 274-275쪽.

4) 金俊淵, 『獨立路線』 (時事時報社, 1959), 4쪽.

그러나 총독부 관계자가 치안유지 협조문제로 송진우와 교섭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

미군이 이 땅에 상륙하고 나서 미군정 외에는 어떠한 단체나 조직에 대해서도 그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행위는 결과론적인 면에서 합리성을 띤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일제의 패망을 예견했다는 지도자급 인사로서 해방 후의 국가건설이나 정치질서 유지 등에 관한 준비나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은 실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⁵⁾ 해방 후 닥치게 될 제반 정세를 감안하여 대비책을 마련했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정세를 관망하게 되었고 결국 정국의 주도권을 呂運亨에게 빼앗기고 말았기 때문이다.

여운형이 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하여 치안유지업무와 함께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준비를 적극적으로 해나갔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고하는 행동에 신중을 기하고 있었는데 이는 연합군이 상륙하고 일본이 정식으로 항복한 후에 연합국과 논의하여 건국을 한다 해도 조금도 늦을 것이 없다는 생각에서였다.⁶⁾ 이러한 판단에 따라 그는 정세를 관망하며 연합군의 상륙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2) 국민대화준비회 결성

주위의 정당 참여권유에 대해 시기상조론을 주장하며 정치활동을 자제하던 고하가 비로소 활동을 개시한 것은 연합군의 상륙이 확실해진 8월 말에 들어서였다.⁷⁾ 미군 비행기에 의해 미군의 진주를 예고하는 삐라가 몇차례 살포되고 난 후였다.

그가 처음으로 착수한 것은 국민대화준비회(이하 준비회)의 결성이었다. 준비회는 중경에 있는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절대 지지하며 연합국에 감사를 표명하기 위한 모임을 갖기 위해 조직된 단체로 그는 준비회의 설립일자를 미군의 진주에 맞추어 9월 7일로 결정했다. 고하를 위원장으로 한 준비회는 그의 측근과 동아일보 관계자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는 그가 시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신중·관망하는 바람에 생긴 현상이었다. 국민대회라고 한다면 보다 광범위하게 인물들을 망라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나서는 바람에 다양한 성향의 인물들을 포섭하지 못하고 주변 인물들만 모인 것이다.

준비회의 발족 하루 전날인 9월 6일 밤 건준은 전국인민대표대회를 소집하여 “연합군과 절충할 인민 총의의 집결체가 있지 않으면 안될 것”⁸⁾이라는 판단 아래 조선인민공화국을 발족시켰다. 따라서 고하가 발족시킨 준비회는 인공과 정국의 주도권을 놓고 대립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준비회는 정당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준비회를 이끌고 결성중이던 한국민주당(이하 한민당)에 합류했다. 인공을 견제하고 보다 본격적인 정치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였다.⁹⁾

어 이 부분에 관해서는 보다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森田芳夫, 『朝鮮終戰の記録』 (東京: 嚴南堂書店, 1964), 72쪽.

5) 李仁, “解放前後片片錄,” 『新東亞』 (1967년 2월), 360쪽.

6) 古下先生傳記編纂委員會(編), 『古下 宋鎮禹先生傳』, 307쪽.

7) 金俊淵, 『獨立路線』, 7쪽.

8) 呂運亨, “朝鮮人民共和國의 發足,” 『白民』 (1945년 12월), 18쪽.

9) 고하가 한민당에 참여하려 하자, 錢鎭漢은 한민당이 명실공히 민족대중정당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당이 대중

한민당에 참여한 고하는 준비회를 해체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시켰는데 이는 정당의 역할과 준비회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었다. 정당이 당파적인 차원에서의 활동을 위해 결성된 것이라고 한다면 준비회는 당파를 떠난 중립적인 차원에서 연합군의 지지를 받고 해외의 망명인사들을 흡수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리고 부수적으로 독립운동의 정통성을 계승한다는 목적에서 설립되었기 때문이다.

준비회는 1945년 10월 20일에는 중앙청 앞 광장에서 연합군 환영대회를 개최하여 이들의 노고를 치하했으며, 12월 19일에는 서울운동장에서 임시정부 환영개선대회를 개최했다. 환영대회에서의 환영사를 통해 고하는 임시정부가 우리 민족에 준 공헌은 절대적인 것이며 임시정부가 중심이 되어 모든 세력들을 응집함으로써 통일에 절대적인 영도력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다.¹⁰⁾ 이와 동시에 그는 임시정부의 현명한 지도에 협력함으로써 국민으로서 부담하여야 할 책무에 충실할 것을 맹세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고하가 준비회를 결성한 것은 중경에 있는 정부를 부인하고 새로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이로써 고하는 정국의 주도권 문제를 놓고 인민공화국과의 사이에 치열하게 전개되는 권력투쟁의 한가운데 서게 되었다.

3) 한국민주당 창당

해방 후 정세를 관망하거나 소규모의 정당 결성을 준비하던 우익진영의 인사들이 대동단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은 고하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준비회발족을 전후해서였다. 당시 元世勳의 주도로 고려민주당이 발족되었으며 金炳魯, 白寬洙, 李仁 등이 조선민족당을 준비하고 있었고 金渡演, 許政, 張德秀 등이 한국국민당을 결성중이었는데 이들은 해방 직후부터 날뛰는 적색분자들을 분쇄하기 위해서는 우익진영의 단결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고 합당을 위한 작업에 나섰다.¹¹⁾ 이들은 한국국민당에서 ‘한국’을 고려민주당에서 ‘민주’를 각각 따서 당명을 한국민주당으로 결정하고 9월 8일에는 발기인의 연명으로 인민공화국 타도를 선언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임시정부 절대 지지와 인공타도를 선언한 한민당 발기인 명의의 성명서가 발표되자 정계에 커다란 파문이 일었다. 당을 만들기도 전부터 공산당과 전면투쟁을 전개했다는 주장에서¹²⁾ 알 수 있듯이 당시 좌익진영이 정국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인공을 반대하는 집단이 최초로 출현했기 때문이다. 인공타도를 기치로 내세우며 한민당이 발기되자 시기상조라고 하며 정당가입을 주저하던 고하는 종래의

속에 침투할 때까지 재벌대변자로 인식되고 있는 송진우의 입당을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錢鎭漢은 한민당을 떠나고 말았다. 錢鎭漢, 『이렇게 싸웠다』 (무역연구원, 1996), 289쪽.

10) 『東亞日報』, 1945년 12월 20일.

11) 白南薰, “韓國民主黨 創黨 秘話,” 『真相』 (1960년 4월), 15쪽.

12) 白南薰, 『나의 一生』 (解慍白南薰先生記念事業會, 1968), 152쪽.

태도를 바꾸게 된 것이다. 공산당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민족진영의 정당을 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준비회도 한민당에 합류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한민당은 민족진영의 인재들을 총망라했다고 자부할 정도가 되었다.¹³⁾

한민당은 9월 16일 천도교기념관에서 창당대회를 갖고 중경임시정부를 정식 정부로 맞이한다고 선언했다. 당시 인민공화국을 지지하느냐 임시정부를 지지하느냐의 갈림길에 놓여 있던 상황에서 우익진영의 인사들이 임시정부를 지지한 것은 당연한 선택이기도 했다. 인공을 중심으로 전열을 정비하고 있던 좌익진영에 대항하기 위해서도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뭉쳐야 했기 때문이다. 또한 창당대회에서 한민당은 李承晩, 金九, 吳世昌 등 7인을 영수로 추대했는데 이는 저명한 독립운동가들을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항일투쟁경력을 보완하고 독립운동단체와 자신을 동일시하려는 의도에서였다.

창당 후 당의 수석총무에 취임한 고하는 당에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유지들로부터 찬조를 받는 한편 당원들로부터 매년 당비를 징수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의 실정에서 당원들이 당비를 낸다는 것은 무리에 가까운 일이어서 당원들의 당비로 운영되는 대중정당을 만들려는 고하의 계획은 실현되지 못했다. 결국 당의 재정을 특정인에게 의존하는 바람에 한민당은 전형적인 간부정당이 말았다.¹⁴⁾

고하가 이끄는 한민당은 종로국민학교를 당사로 사용하다가 동아일보사로부터 사옥을 당사로 제공받아 3층의 강당을 당본부로 1층을 서울시 당부로 사용했다. 그는 또한 복간된 동아일보의 사장을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중에는 ‘동아일보의 사장실은 사장실이 아니라 당수실’이라는 말이 나돌기도 했다.¹⁵⁾ 이처럼 한민당과 동아일보는 인적·물적·재정적인 면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동아일보는 후일 “한민당의 幟舌”¹⁶⁾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4) 동아일보 복간

한민당을 대표해서 하지 사령관, 아놀드 군정장관 등 미군정 관계자들을 자주 만났던 고하는 1945년 11월 중순 하지 사령관과 회견하는 자리에서 동아일보 복간을 준비하는데 협조해 줄 것을 부탁했다. 그때까지 한민당은 ‘한국민주당 특보’라는 제하의 당보를 통해 비정기적으로 당의 정책과 노선을 선전했고 주장을 펼쳐 왔었다. 그러나 당보는 신문에 비하면 독자가 제한되어 있는데다가 정치적인 영향력도 미미할 수밖에 없었기에 그는 신문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좌익진영의 언론과 효

13) 金度演, 『나의 人生白書』 (日新文化社, 1965), 157쪽.

14) 한민당의 중앙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물론 지방당 조직비에 지출되는 자금마저 김성수가 전담하다시피 했다. 李相敦, “正統野黨으로 본 政治指導者像,” 『新東亞』 (1981년 11월), 283쪽.

15) 東亞日報社, 『東亞日報社史』 卷二 (東亞日報社, 1978), 42쪽.

16) 백범사상연구소(편), 『백범어록』 (화다출판사, 1978), 142쪽.

과적으로 대항하기 위해 그리고 한민당이 견지하고 있는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느 매체보다 민족지로서 높은 명성을 갖고 있던 동아일보의 복간이 절실하다고 느꼈던 것이다.

미군정 당국의 협조를 받아 고하는 자신이 직접 사장이 되어 신문 발행을 위한 준비에 들어가 주간, 편집국장, 총무국장, 영업국장 등의 진용을 갖추었다. 처음에는 활자와 윤전기가 없어 군정당국에 교섭하여 경성일보사의 시설을 빌리기로 하고 신문 발행에 착수했다. 이러한 그의 노력으로 1945년 12월 1일 타블로이드판의 동아일보가 다시 복간될 수 있었다. 한민당은 복간된 동아일보를 활용하여 일반 대중을 상대로 자당의 보수적인 노선과 주장을 펼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당세를 확장할 수 있었다.¹⁷⁾

고하가 사장과 당수를 겸했다고 해서 동아일보가 전적으로 한민당의 입장만 반영한 것은 아니었다. 언론과 정당이 추구하는 목표가 근본적으로 달랐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즉 그를 사장으로 추대하고 있는 동아일보와 그를 수석총무로 받들고 있는 한민당 사이에는 객관적인 보도와 정세분석을 놓고 견해의 차이가 생기는 일도 있어 충돌을 일으키기도 했던 것이다. 한민당은 동아일보를 자신들의 기관지로 생각했고 동아일보는 동아일보대로 언론의 사명을 다 하려고 하는데서 오는 마찰이 있었다.¹⁸⁾ 그렇지만 동아일보가 거시적으로 한민당의 정책과 노선을 지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한민당의 지지기반을 확대하는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갔고 결과적으로 동아일보의 복간은 한민당에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3. 고하의 정치노선

고하 송진우가 한민당을 이끌어나가면서 취한 노선은 현실주의 노선이라고 부를 수 있다. 건준과의 관계에서나 미군정 그리고 중경 임시정부와의 관계에서 그가 취한 행동이나 노선은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한민당이 채택한 강령 및 정책에서도 나타나며 신탁통치문제가 대두되면서 고하가 취한 행동을 보아도 알 수 있다.

1) 현실주의 노선

① 건준과의 관계

해방 직후 우리 민족에 가장 절실히 요청되었던 것은 자주 정부수립을 위한 통일전선의 결성이었다. 여기서 통일전선의 핵심은 고하 송진우와 몽양 여운형의 합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두 사람의 합작문제는 해방 직전부터 제기 되었었다. 합작문

17) 東亞日報社, 『東亞日報社史』 卷二, 40-41쪽.

18) 古下先生傳記編纂委員會(編), 『古下宋鎮禹先生傳』, 326쪽.

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고하측은 임시정부를 추대할 것을 제의했었고 몽양측은 국내의 혁명세력을 중심으로 하고 해외 단체를 망라하여 독립정부를 세울 것을 주장했었다.¹⁹⁾

이처럼 양측이 임시정부 추대문제를 놓고 크게 엇갈리는 바람에 협작을 이루지 못한 채 해방을 맞이했다. 해방 후에도 양자의 협작문제는 여러차례 거론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서 노력도 하였으나 이 역시 실패하고 말았다. 임시정부의 정통성 인정 여부문제를 비롯하여 건준 결성과 인공 선포에 대한 시각 차이가 크게 작용한 때문이었다.

건준의 결성은 본질적으로 총독부와 여운형 사이에 이루어진 협상의 산물이었다. 총독부로서는 패망 이후 닥칠지도 모를 치안상의 공백을 우려하여 한민족 내에 신망이 있다고 여긴 여운형에게 치안유지를 의뢰하여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받으려 했고 여운형으로서도 이 요청을 받아들여 치안유지에 협조함으로써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하려 했던 것이다. 8월 15일 오전의 이 협상은 한편으로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정권이양의 한 형태로 주권이 일제의 손으로부터 한민족으로 넘어오는 하나의 과정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총독부의 비호 속에 정권찬탈을 기도한 것이라는 비난이 나올 소지를 내포하고 있었다. ‘민족의 대표성이 이민족의 선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냐’ 하는 의문이 바로 그것이었다. 건준에 대한 이러한 대립된 평가는 양 진영의 결합을 본질적으로 불가능하게 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건준의 구성에 관한 견해 차이였다. 고하측은 건준의 구성원이 극히 소수에 불과하며 또 편파적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有志者모임’과 같은 것으로 건준을 개편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운형측은 고하가 주장하는 유지자란 일체로부터 욱 한번 듣지 않고 적의 뺨 한번 때리지 못하던 일제시대의 신사들이라고 비난하고 이들로 건준을 채우려는 시도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²⁰⁾

결론적으로 고하는 여운형이 인공 선포에 앞장선 것으로 보아 공산당의 앞잡이라 협력할 수 없었다는 것이고,²¹⁾ 여운형은 고하의 배후에 보수진영이 있다고 보고 그와의 협작을 중단한 것이다.²²⁾ 이와 같은 견해차이로 두 사람은 결국 힘을 합치지 못하고 말았다. 이들의 결별은 해방 후 정치질서의 확립과 새로운 정부의 수립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커다란 손실이 아닐 수 없었다. 전 민족이 단결하여 국토의 분단을 막고 자주독립정부 수립에 매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좌우로 나뉘어 대립과 갈등을 반복하는 소모적인 길로 접어들게 했기 때문이다.

협작이 결렬되자 고하는 미군정당국자를 만나 건준을 모체로 한 인공을 비난했고 미군정이 공식 성명으로 이를 부인해 줄 것을 건의했다.²³⁾ 이에 따라 미군정장관은

19) 民主主義民族戰練(編), 『朝鮮解放年報』 (文友印書館, 1946), 79-80쪽.

20) 民主主義民族戰練(編), 『朝鮮解放年報』, 82쪽.

21) 愼道晟, “韓民黨 創黨 1,” 『朝鮮日報』, 1982년 2월 24일.

22) 李萬圭, 『夢陽 呂運亨鬪爭史』 (叢文閣, 1946), 206쪽.

남한에는 오직 미군정만 있을 뿐이며 자칭 조선인민공화국은 권위와 세력과 실체가 없는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그러한 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로써 인공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은 반면 한민당은 미군이 진주한지 1개월만에 최초의 개가를 쟁취할 수 있었다. 한민당을 중심으로 한 고하의 건준 및 인공타도노선은 현실적으로 미군정과도 이해가 일치했기 때문이었다.

② 미군정과 관계

1945년 9월 7일 인천에 상륙한 하지 중장 휘하 24군단 소속 미군은 한국에 대해 하등의 예비지식도 갖지 않은 채 군정에 임하였다. 이들은 총독부의 관리를 유입시키는 등 현상유지를 기본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이러한 정책은 현상개혁을 지향하는 좌파를 견제하는데 아주 유효한 방법이기도 했으나²⁴⁾ 이로 인해 민중들은 군정에 대해 커다란 불만을 품게 되었다. 해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식민통치기의 관리와 제도가 그대로 지속되고 있어 해방을 느낄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되었기 때문이다. 일제 관리들의 유입은 행정사무의 정확한 인계와 일제 관리 가운데 범죄 용의자를 골라내기 위해서였다는 주장도 있으나²⁵⁾ 해방된 지역의 통치에는 부적절한 정책이었음에 틀림없었다.²⁶⁾

이와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미군정과 협력문제를 놓고 한민당 내부에서는 격론이 벌어졌다. 원세훈, 김약수 등은 협력하지 말 것을 주장했고 조병옥, 김병로 등은 협력할 것을 주장하여 결론을 내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²⁷⁾ 찬반 양론으로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장내를 정돈한 고하는 한민족의 정치적 성숙도가 아직 낮기 때문에 訓政期를 거친 뒤에 자주독립을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²⁸⁾ 고하의 주장으로 한민당은 군정과 협력하는 쪽으로 당론을 결정하게 되었다.

이후 고하를 비롯한 한민당 수뇌부와 미군정 당국자들은 잦은 접촉 및 상호방문을 통해 협조체제를 긴밀히 했다. 자신의 견해를 군정당국에 반영시킬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한 한민당은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명망과 식견을 갖춘 인사로 하여금 군정의 행정과 인사의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하는 기구를 설치할 것을 건의했다. 이 건의를 받아들여 미군정은 한민당 인사들이 주축이 된 11명의 행정고문을 임명하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한민당과 미군정의 유착이라는 지적을 받았으나 군정당국은 이에 개의치 않고 한민당원들을 군정청의 각 부서에 등용했다.²⁹⁾ 미군정이 한민당을 각계

23) 李敬南, 『雪山 張德秀』 (東亞日報社, 1982), 315쪽.

24) 崔相龍, “分割占領과 信託統治,” 安清市(편), 『現代韓國政治論』 (法文社, 1992), 118쪽.

25) 崔夏永, “政務總監 韓人課長 呼出하다,” 『月刊中央』 (1968년 8월), 129쪽.

26) 미군정의 이와 같은 정책에 대해 한국민들은 행정에 반대하고 식량을 매점하며 납세를 거부하고 모든 일을 되도록 복잡 곤란하게 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미군이 독립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방해하려고 온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는 분석도 제기되었다.

Richard E. Lauterback(國際新聞社 譯), 『韓國美軍政史』 (國際新聞社出版部, 1947), 44쪽.

27) 洪元吉, 『淸谷回顧錄』 (第一文化社, 1978), 103-104쪽.

28) 柳珍山, 『헤뜨는 地平線』 (한일문고, 1972), 33쪽.

29) 한민당원들이 군정청 관리로 진출한 배경 및 그 현황에 대해서는 沈之淵, 『韓國現代政黨論』 II (創作과 批評

각층이 망라된 교양 있고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정당이라고 여겼기 때문이고³⁰⁾ 당론으로 한민당이 미군정에 협력을 선언했기 때문이었다. 군정의 후원에 힘입어 한민당은 괄목할만한 성장을 했고 여당적인 입장에서 권력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다. 이는 당시 유일하게 합법적인 무력수단을 소유한 단체인 경찰이나 법을 집행 감독하는 검찰 법원 계통에 한민당 출신들이 상당수 진출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③ 임시정부와의 관계

임시정부 절대 지지를 주장한 고하는 미군정 당국에 임정요인들의 귀국을 주선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환국지사후원회를 조직하기도 했다. 동아일보와 한민당 인사를 주축으로 한 이 후원회는 해외에서 조국광복을 위해 싸운 애국지사들을 경제적으로 돕기 위해 만든 것으로 고하는 일차적으로 900만원의 기금을 만들어 이를 임시정부측에 전달했다.³¹⁾ 이후 고하는 이들을 환영하는 대회에서 환영사를 하는 등 관계를 긴밀히 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12월 하순 임시정부 요인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국내 인사들의 친일행적이 거론되어 분위기가 어색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자 고하는 이들에 대한 생각을 달리하게 되었다. 국내에서 친일하지 않고서 어떻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겠느냐는 생각을 임정측이 갖고 있었는데 한민당의 외무부장인 장덕수가 특히 친일논란의 대상이 되었다.³²⁾ 그 자리에서 고하는 친일과 숙청은 급한 문제가 아니므로 우선은 힘을 합쳐 건국에 앞장설 것을 당부하여 사태를 수습했으나 이 사건을 계기로 그는 임시정부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게 된다. 즉 임시정부는 一人一黨식으로 수많은 정당이 연립한 조직체였으며 귀국 즉시 행동의 통일을 잃어 기대에 어긋나 다른 인식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³³⁾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현실주의 노선에 입각하여 분석한 결과 생긴 것으로 임시정부측에도 시정해야 할 점이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1945년 12월에 들어서면서 고하는 정당 사회단체의 단결이 필요하다는 일반의 여론에 부응하여 국내 정치세력 간의 통일전선을 결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즉 한민당, 국민당, 인민당, 공산당 등 4개 정당의 협의체를 만들려고 시도한 것이다. 이 4개 정당을 임시정부의 테두리 안에 뭉치게 하여 국민대회를 열고 행동의 통일을 보여 정부수립의 밑바탕을 이루려고 한 것이었다. 그러나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통일전선을 결성한다는 고하의 이 계획은 여운형의 입장과 합치점을 찾지 못해 그만 무산되고 말았다. 임시정부 대신 인공 지지를 선언했던 여운형이 인민당의 ‘옳은 노선’을 중심으로 통일할 것을³⁴⁾ 주장했기 때문이다.

社, 1984), 55-59쪽.

30) *FRUS*, 1945, Vol. VI, 1062쪽.

31) 古下先生傳記編纂委員會(編), 『古下宋鎮禹先生傳』, 331쪽.

32) 李敬南, 『雪山 張德秀』, 330쪽.

33) 古下先生傳記編纂委員會(編), 『古下宋鎮禹先生傳』, 333쪽.

임시정부가 주도하는 통일전선을 만들려고 했던 고하의 계획이 좌절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모스크바 3상회의는 한반도에 최고 5년간 미·영·중·소 4개국에 의한 신탁통치를 실시하기로 결의했다. 한반도에 신탁통치를 실시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외신이 보도되자 정치인은 물론 전 국민들도 극도로 흥분했다. 탁치문제의 대두로 해방정국은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는데 이 와중에서 고하는 목숨을 잃게 된다.

2) 訓政과 反託

모스크바 3상결정이 발표되자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한 냉정하고도 객관적인 분석 대신에 주관적인 감정이 앞서 신탁통치를 일제의 식민통치와 동일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탁치를 한민족을 노예화 하려는 조치라고 생각하고 3상결정을 민족에 대한 사형선고문처럼 여겼던 것이다. 상황이 전혀 예상치도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자 하지 사령관의 정치고문인 「랭턴」은 탁치는 도덕적·실질적인 면에서 볼 때 부적절하기 때문에 이를 중지해 줄 것을 본국 정부에 건의하기까지 했다.³⁵⁾

이에 대해 미국무성은 신탁통치 원칙은 이미 한반도 점령 이전에 결정된 것이고 이 원칙의 채택이야말로 38선 장벽을 확실하게 제거하는데 필요하다고 말하고 탁치는 한반도의 통일과 독립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³⁶⁾ 국제적으로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철회할 수 없다는 것이 미국무성의 입장이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미군정 당국도 본국의 훈령에 따르지 않으면 안되게 되고 말았다.

신탁통치 문제가 제기되자 고하는 조선을 독립시키기로 한 국제협약을 무시하고 민족의 발전을 저해하는 탁치는 단연코 배격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탁치를 배격하기 위하여 한사람도 빠짐없이 국민운동을 전개하자고 제의했다.³⁷⁾ 한편 임시정부는 전국적인 반탁분위기에 편승하여 신탁통치반대국민총동원위원회를 조직하고 대규모의 반탁운동을 전개했다. 그리고 이 반탁운동을 계기로 미군정을 접수, 주권을 회복한다는 전략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임시정부 내무부장 申翼熙 명의의 포고를 통해 미군정 소속 경찰기구의 한인 직원은 전부 임정의 지휘하에 속할 것을 선언했으며 파업과 전 시가의 철수를 지시했다.

사태가 이에 이르자 고하는 매우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 한민당의 정신적인 지주로 되어 있는 임시정부에서는 탁치를 배격하고 군정을 접수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반면, 한민당의 현실적인 배경으로 되어 있는 미군정은 탁치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탁치는 한민족의 자치능력과 창조적 능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과³⁸⁾ 탁치는 38선을 제거하고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원조와 후견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주장이³⁹⁾ 각각 대립하게 된 것이다. 한민당과는

34) 『解放日報』, 1945년 12월 8일.

35) *FRUS*, 1945, Vol. VI, 1130-1132쪽.

36) *FRUS*, 1945, Vol. VI, 1137-1138쪽.

37) 『東亞日報』, 1945년 12월 29일.

38) 李應辰, “信託統治와 解放運動,” 『開闢』 (1946년 8월), 68쪽.

39) *FRUS*, 1945, Vol. VI, 1137쪽.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는 두 집단이 이처럼 전혀 상반된 태도를 취하자 한민당은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반탁운동을 주권회복의 계기로 삼고 이를 발판으로 하여 정부를 수립하려는 임시정부측은 “새출발로서 독립운동을 개최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⁴⁰⁾는 생각에서 대대적인 반탁운동을 계획했다. 이에 대해 미군정 당국은 임정이 공안질서를 문란케 하고 미군정을 접수하려 하였으며 미군을 군정으로부터 축출하려 했다고 하여 임정요인들을 해외로 추방하려는 계획까지 수립했다.⁴¹⁾ 이처럼 탁치문제에 관한 두 집단의 견해 차이는 물리적인 충돌 일보직전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소식을 전해들은 고하는 임시정부측의 처사가 몰지각했을 뿐더러 미군정의 방침도 가혹하다고 생각하여 적지않게 당황했다.⁴²⁾ 그리하여 그는 양자 사이의 알력을 해소하기 위한 행동에 나섰다.

우선 탁치안이 발표된 다음날 김준연을 대동하고 경교장을 방문, 탁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회합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고하는 신탁통치를 반대한다는 데는 이론이 없으나 반탁운동의 방법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즉 미군정을 부인하고 정권을 인수하려는 임정의 계획을 반대하고 미군정과는 충돌을 피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⁴³⁾ 미군정을 부인하고 임시정부의 이름으로 독립을 선포하게 되면 결국 미군정과 충돌이 일어나고 이럴 경우 공산당이 어부지리를 취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군정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법과 질서의 테두리 내에서 반탁의사를 표명하자는 것이 그의 입장이었다. 이처럼 고하가 온건론을 제시하자 고하와 임정요인들 사이에는 격론이 벌어졌고 회의는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한 채 다음날인 29일 새벽 4시에서야 산회하고 말았다.

당시 ‘독립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식으로 전 국민이 흥분한 상태였기 때문에 임시정부에서 제시한 반탁운동에 대해 방법론상의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은 오해 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이었다. 이처럼 반탁운동의 방법을 놓고 고하가 가급적이면 미군정과는 충돌을 피해야 한다는 식으로 온건한 태도를 취한데 대해 그리고 이로 인해 임시정부의 권위가 손상된 데 대해 임정요인들은 크게 불만이였다. 이러한 불만은 확대되고 와전되어 곧바로 고하가 신탁통치를 찬성했다는 소문으로 퍼지게 되었다. 고하가 극동국장 「빈센트」의 탁치실시 발언이 나왔을 때도 찬의를 표했으며 그 후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러한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고 다음과 같은 비난이 나오는 데까지 이르렀다.

“한국민주당 당수 송진우는 우리 민족이 근대국가와 민주정치를 가져보지 못하였으므로 선진국의 지도를 받아야 할 것이니 신탁통치는 선진국의 지도를 받는다

40) 백범사상연구소(편), 『백범어록』, 54쪽.

41) 趙炳玉, 『나의 回顧錄』(民敎社, 1959), 168쪽.

42) 古下先生傳記編纂委員會(編), 『古下宋鎭禹先生傳』, 336쪽.

43) 古下先生傳記編纂委員會(編), 『古下宋鎭禹先生傳』, 337쪽.

는 훈정의 의미에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용납될 수 없는 망상이다.”⁴⁴⁾

이와 아울러 모스크바 3상결정이 발표되었을 때도 고하는 이를 구태여 반대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하여 찬성하는 태도를 취했고 탁치를 소위 후진 약소국을 위하여 선의로 보호 지도해 주는 것으로 알았으며 탁치를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고 주위 사람들에게 역설하고 있었다는 비난도 제기되었다. 고하에 대한 이러한 비난은 반탁운동의 방법을 놓고 발생한 임시정부와의 견해 차이가 과장되었기에 퍼진 것이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주장이나 비난이 고하의 말이나 글을 직접 인용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소문을 인용하여 ‘했다고 한다’라는 식으로 간접적으로만 서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군 상륙 후 고하는 정치훈련 이른바 ‘훈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고 이에 입각해서 군정에 협력하기로 당론을 결정했던 것인데⁴⁵⁾ 후일 탁치문제가 제기되자 그의 훈정론을 찬탁으로 단정짓고 비난한 것이라고 분석된다. 결국 고하가 훈정론을 주장하는 바람에 탁치가 초래되었고 또 그가 임정이 제시하는 반탁운동방식에 반대하는 것으로 보아 신탁통치를 적극 찬성하고 있음에 틀림없다는 식으로 유추한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임시정부 추종자들을 분노케 하기에 충분한 것이었기에 그들은 ‘흑백은 분명히 가려야 한다’는 의도에서 고하가 “민족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신탁통치를 지지하는 큰 과오를 범하였다”⁴⁶⁾고 판단하고 그를 암살하기로 모의했다.

고하로서는 현실적으로 보다 합리적인 반탁운동방법을 모색하고자 한 것이었는데 정치적인 불신과 오해로 피살되는 사태로까지 확대되고 말았다. 정치테러에 고하가 희생당함으로써 고하와 한민당은 “신탁통치안은 한국민주당의 高等策課의 일단이었음을 가히 추측할 수 있는 일”⁴⁷⁾이라는 반대파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반박할 기회를 영원히 잃고 말았다.

4. 고하의 정치이념

고하 송진우의 정치이념은 한민당의 정강과 정책을 분석함으로써 그 일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고하 개인의 이념이라기보다는 한민당 구성분자들의 이념과 사상을 총체적으로 집약한 것이기에 고하를 이해하는데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고하의 정치이념이 보다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은 그가 1945년 12월 22일 오후 7시 15분 중앙방송국에서 발표한 정견 방송과 잡지에 집필한 ‘신년소감’이라는 짧은 글에서이다. 해방 후 자신의 이념을 체계화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이념이 담긴 글은 이 외에는 없는 실정이다. 이제 두 자료를 중심으로

44) 韓賢宇, “暗殺前夜,” 『世代』 (1975년 1월), 233쪽.

45) 그의 훈정설은 민주주의의 토착화에 필요한 일리 있는 구상으로서 제헌의원 선거를 ‘작대기 기호’로 행한 경험이 있는 현실에서는 신중하게 음미할만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柳珍山, 『해뜨는地平線』, 89쪽.

46) 韓賢宇, “暗殺前夜,” 『世代』, 242쪽.

47) 崔興朝, 『民主國民黨의 內幕』 (新聞의 新聞社, 1957), 21쪽.

하고 그가 일제시대에 발표했던 글들을 참조하여 고하의 정치이념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고하는 우선 해방과 동시에 연합군이 진주하여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하고 행정권을 비롯한 일체의 권리를 임시정부에 이양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연합군의 진주가 지연되는 바람에 건준이 결성되어 그 기간이 우리민족의 자유와 질서를 위해 충실히 이용되지 못했다고 단언했다. 건준의 결성과 행동이 명랑해야 할 민족적 거취를 혼돈하게 하였고 귀일해야 할 민족적 사상을 방해했다고 파악한 것이다. 이러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고하는 패잔 일본 제국주의의 원호 아래 발생한 일체의 정권 즉 인민공화국을 단호히 부인하고 임시정부를 절대로 지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러한 명분 아래 결당한 것이 한민당이라고 주장했는데 이것이 그의 정치이념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고하는 한민당이 민족독립운동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임시정부를 지지하는 데서 출발했으므로 한민당이야말로 3천만의 의사를 집결한 당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신념에서 그는 한민당은 결코 일 계급의 정당이 아니고 민족 전체를 포용 흡수한 정당이라는 논리를 폈다. 그리하여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전 민족의 균등한 생성 발전을 추진하는 것이 한민당의 근본적인 이념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곧 고하의 정치이념이기도 했다. 이러한 근본이념을 성실히 실현하기 위해 한민당은 다섯 가지의 강령을 내세웠고 이에 대해 고하는 나름대로의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의 정치이념을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민족의 완전한 자주독립국가의 실현이었다. 이는 일본 제국주의의 통치로부터 벗어났지만 38도선을 경계로 소련군과 미군이 각각 점령하여 군정을 실시하고 있어 아직 자주독립이 실현되지 못했기 때문에 내세운 것이었다. 독립 실현의 방법으로 고하는 하루빨리 전 민족이 일치단결하여 중경임시정부를 절대 지지함으로써 완전한 독립국가로 승인받을 것을 주장했다. 사상이 다르고 정책이 다른 점도 있지만 현 단계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민족독립의 완성임을 깨달아 사상과 정책을 떠나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상과 정책은 독립이 된 후에 논의하고 우선은 행동을 통일하여 내분을 종식시키자는 것인데 이럴 경우 민족의 정신과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으며 자치능력을 세계에 과시할 수 있어 비로소 우리는 자립할 수 있게 된다는 생각이었다. 단결에 대한 이러한 강조는 일제시대 그가 강조했던 “무엇보다도 모든 주의와 사상의 토대가 되고 근거가 될만한 ‘힘’ 곧 단결력을 준비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⁴⁸⁾이라는 견해의 반복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민주주의 정체 수립을 주장한 것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고하는 민주주의 이념의 옹호자였다. 그는 비록 독립한 국가가 되더라도 그 권력이 한사람의 손에 집중되어 전횡하게 되고 일 계급의 독재로 된다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자유가 보장될 수 없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에는 오직 마찰과 대립이 있을 뿐이므로 모두가 희구하는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48) 宋鎮禹, “무엇보다도 힘,” 『開闢』 (1924년 4월), 92쪽.

고하가 파악한 민주주의 원리란 ‘민중에 의하여, 민중을 위한, 민중의 정치가 실현되는 것’이었다. 그는 이 원리가 실현될 경우 ‘민중의 자유는 확인되고 민중의 평등은 보장될 것’이라고 보았다. 고하는 과거에 “정신적으로 각개의 자유권을 보장하는 것과 물질적으로 각개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이 그 원리에 있어서는 하등의 차이가 있으랴”⁴⁹⁾라고 자유와 평등에 대해 강조한 바 있었는데 이러한 생각이 해방 후 민주주의 정체의 수립이라는 정치이념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경제적으로 고하는 근로대중의 복리증진을 들었다. 이는 민주주의라는 것이 정치적으로만 자유와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자유와 균등을 기초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과거에는 자유에만 치중하고 균등에 관해서는 진실한 고려가 없었기 때문에 자본가가 이윤추구에 분방한 나머지 경제적 균등의 기회가 파괴되고 근로대중의 생활은 안정을 잃었다고 분석했다. 정치적 민주주의가 독재자의 전횡을 타파하는데 있는 것과 같이 경제적 민주주의는 독점자본을 제압하는데 있다고 생각한 고하는 진정한 의미의 경제적 민주주의는 그 정책적인 면에서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일치된 점이 없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생각에서 그는 대산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해야 하며 토지정책도 종래의 불합리한 착취방법을 배제하기 위하여 일본인 소유 토지를 몰수하여 농민에게 경작권을 분배하고 조선인 소유 토지도 그 소유를 제한하여 민중의 생활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그가 정치적자유와 평등 못지 않게 경제적 자유와 균등을 강조한 것은 사회적 국가적 이익을 위해 극도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소작인의 지위를 보장하는 소작입법이 필요하다는⁵⁰⁾ 생각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분석된다.

넷째, 민족문화를 양양하여 세계문화와 공존할 것을 주장했다. 이는 한민족의 문화는 그 특유한 향기를 가지고 배양되어 민족의 생활을 충실히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를 더욱 향상시키고 발전시킴으로써 민족의 유지와 국가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자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이를 위해 고하는 일제의 식민통치로 유린되고 훼손된 우리의 민족문화를 재건하는 동시에 조상의 풍부한 창조력을 계승·발양하고 구미의 장점을 흡수하여 새로운 문화를 세울 것을 주장했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민족과 국가의 유구한 발전에 공헌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세계문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족문화에 대한 강조는 일제시대 한글날의 제정을 주장했던 것이나⁵¹⁾ 조선 본래의 문화를 정돈·수립해야만 ‘正明한 인식’을 갖게 되어 나아갈 길을 찾게 될 것이라는⁵²⁾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고하는 국제헌장을 준수하여 세계평화의 확립에 기여할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그는 먼저 민족적 통일과 주권을 수립하고 타국의 압제와 특권을

49) 宋鎮禹, “自由權과 生存權,” 金東煥(編), 『平和와 自由』 (三友社書店, 1932), 172쪽.

50) 宋鎮禹, “小作立法의 必要,” 『巨人的 畧略』, 古下宋鎮禹關係資料文集, 60-61쪽.

51) 고하는 배우기 쉽고 쓰기 쉬운 우리 조상이 창작한 훈민정음이야말로 문자로서 모든 조건을 구비한 완전한 문자라고 주장하고 이날을 영구히 기념하기 위하여 최선의 방법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제의, 한글날의 제정을 촉구했다. 宋鎮禹, “最善의 努力과 方法을 講究하자,” 『巨人的 畧略』, 古下宋鎮禹關係資料文集, 51쪽.

52) 宋鎮禹, “이 江山 이 民族,” 『巨人的 畧略』, 古下宋鎮禹關係資料文集, 100쪽.

부인하여 명실상부한 민족자결의 권리를 주장했다. 이와 동시에 전세계 민족의 자유와 평등, 평화와 진보라는 국제적 우애로써 결합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국제현장을 준수하고 호혜평등을 기초로 한 외교정책을 수립함으로써만 국제평화에 기여하고 따라서 인류의 진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이념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일제시대부터 조선이 동양의 대세나 세계의 대세로 보아 어느 약소국보다 중대한 지위를 점유하고 있으며 정치적으로나 지리적으로도 세계의 어느 약소국보다 중요한 지위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민족적 자립과 평화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⁵³⁾ 바로 이러한 이념의 연장선상에서 세계평화의 기여를 지향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정치이념을 갖고 있었던 고하는 당시의 정치적인 단계를 사회민주주의 혁명단계로 파악했다. 그가 해방정국에서 필요로 하는 혁명을 사회민주주의혁명이 라고 규정한 것은 박헌영의 부르조아 민주주의혁명단계론을 반박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된다. 8월테제에서 박헌영은 해방정국에서 수행해야 할 혁명을 부르조아 민주주의혁명으로 규정하고 이 단계에서는 노동자, 농민, 도시 소시민과 인테리겐차가 혁명의 동력이 되며 이는 토지문제를 혁명적으로 해결하여 광범위한 농민계급을 동맹자로 전취함으로써만 완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지주, 고리대금업자, 반동적 민족자본가는 친일적 태도를 위장하기에 여념이 없으며 자신의 이익을 옹호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이들과 투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헌영은 특히 “송진우와 김성수를 중심으로 한 한국민주당은 지주와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대표한 반동적 정당”⁵⁴⁾이라고 비난했는데 이에 대한 반박으로도 고하가 제시한 것이 사회민주주의혁명이었다. 비록 토지소유권이 절대성을 가졌다고 할 지라도 국가적 이익이나 사회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결코 절대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한 고하는 토지수용령을 그 예로 들었었는데,⁵⁵⁾ 아마도 이러한 신념이 해방 후 사회민주주의혁명론의 이론적 기초가 되었으리라고 분석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는 이 내용을 보다 구체화 하지 못했다. 정치테러에 의해 희생당했기 때문이다. 사회민주주의혁명의 내용으로 그는 다음과 같은 짤막한 내용만을 언급했을 뿐이다.

“혹자는 현단계를 부르조아 민주주의혁명이라고 하나 그것은 일개 공식론에 불과하다. 현단계는 大理想 하에 수행되는 사회민주주의혁명단계라고 본다. 토지는 소작권 설정에 의한 국유제로 해야 한다. 토지의 재분배는 몇십년 후에 또다시 토지점병의 폐해를 야기시킬 것이니 백년지대계가 아닐 것이다. 철도, 선박, 전신, 특히 의식주에 관한 대기업은 국영으로 하여 시설을 개선하고 노동자 대우를 향상시킬 것이다.⁵⁶⁾

53) 宋鎮禹, “朝鮮의 世界的 地位,” 『巨人의 숨결 : 古下宋鎮禹關係資料文集』, 68쪽.

54) 朴憲永, “현 정세와 우리의 임무,” 김남식 심지연(편), 『박헌영노선 비판』 (世界, 1986), 184쪽.

55) 宋鎮禹, “小作立法의 必要,” 『巨人의 숨결, 古下宋鎮禹關係資料文集』, 60쪽.

56) 宋鎮禹, “年頭所感,” 『先鋒』 (1946년 1월), 9쪽.

이와 아울러 고하는 교육문제와 사회보험문제 등은 사회·교육정책에 의하여 이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孫文의 삼민주의는 중국보다 먼저 이 땅에서 실현을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하의 사회민주주의가 민족·민권·민생을 주장한 삼민주의와 유사한 내용을 지닌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후일 장덕수가 주장한 “사회혁신에 의한 계급해방”⁵⁷⁾을 의미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고하나 장덕수의 이러한 견해나 이념은 한민당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배치되는 것이었기에 당론으로 채택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이념을 소유한 인물들이 한민당 내에 있었기에 좌익진영 또는 중도진영과 어느 정도 대화가 가능했었다. 실제로 이들 두 사람이 피살당한 후 한민당은 더욱 더 극우적인 노선으로만 치달았다. 그리하여 한민당은 좌익진영은 물론 중도진영 또는 임시정부의 김구 주석마저 공산주의자라고 비난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⁵⁸⁾ 이로 인해 정국은 더욱 경색되었고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이 확대 증폭될 수밖에 없었다.

5. 맺음말

고하 송진우의 피살은 정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해방 후 방대한 인맥을 거느리고 우익진영의 구심점으로 정국을 수습하려고 노력했던 고하가 타계함으로써 우익진영은 일시 혼란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어느 때보다 그의 식견과 경륜 그리고 리더십이 요청되던 시기에서 갑자기 그가 세상을 떴기 때문이다.

일찍이 신학문에 뜻을 두고 일본 유학을 다녀온 고하는 일제치하에서 벗어나기 위해 3·1운동을 준비하는데 적극 가담하기도 했고, 동아일보를 이끌고 한때는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해방 후에는 현실주의 노선에 입각하여 미군정에 협력을 선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고하의 인생은 무엇보다 종이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종이에 먹칠하는 것이 그의 인생 사업인 까닭”⁵⁹⁾에 그는 한민당의 수석총무직을 맡으면서도 동아일보의 복간에 힘써 사장직을 겸할 정도였다.

임시정부 절대 지지를 선언했던 고하는 1945년 말 전개된 반탁운동을 계기로 미군정을 접수하여 정부를 수립하고 주권을 행사하려는 임시정부의 계획에 강력히 반대했다. 신탁통치에 대해 비분강개하여 즉시 독립을 쟁취하자는 임정의 명분론에 맞서 그는 “미군정과 협력해서 공산당을 타도하고 신탁통치를 반대하자는 현실론”⁶⁰⁾에 입각해 있었다. 당시의 격양된 분위기에서 고하의 현실론은 임시정부에서 제기한 명분론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써 그는 목숨을 잃고 말았다. 고하가

57) 장덕수는 세계의 조류는 토지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경작농민에게 분배하고 노동자에 대하여는 대규모의 사회입법을 실시하여 계급해방에 전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미국에서도 산업민주화와 노동자의 지위 향상 문제가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고 분석하여 송진우의 사회민주주의혁명과 궤를 같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張德秀, “國際情勢報告,” 沈之淵, 『韓國民黨研究』 I (폴빛, 1982), 397쪽.

58) 金俊淵, 『韓國民黨小史』 (韓國民黨宣傳部, 1948), 75-76쪽.

59) “人物素描 宋鎮禹,” 『新天地』 (1946년 2월), 27쪽.

60) 李相敦, “눈부신 政治工作; 쓰러진 巨木 宋鎮禹,” 『新東亞』 (1977년 8월), 126쪽.

사망하자 한민당은 그의 유지를 이어 평소 그가 견지했던 완전독립과 탁치배격에 매진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⁶¹⁾

고하의 장례식은 1946년 1월 5일 동아일보사 앞 광장에서 한민당, 국민대회준비회, 동아일보 3단체의 합동장으로 거행되었다. 모두 자주독립정부의 수립과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그가 온갖 정열을 기울여 만들었거나 이끌었던 단체들이었다. 그의 죽음은 자주정부수립의 지연으로 정치질서가 바로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각 정치세력이 힘을 합치지 못하고 불신한 결과 빚어진 민족적 비극의 하나였다. 그러나 고하가 이끌었던 한민당은 그 후 대한민국 정부수립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자유와 평등에 대한 그의 정치이념은 오늘날까지도 전해 내려온다고 할 수 있다.

심지연 :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정치학 박사.

동아일보 기자, 한국정치학회 회장, 국회입법조사처장 역임.

현재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61) 성명서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본당 수석총무 송진우씨는 금 30일 오전 6시 원서동 74번지 자택에서 흉한에게 저격되어 급서하였다. 본당이 발족한지 불과 3삭 여에, 또 우리 민족의 광복대업이 완성되려 하는 이때 특히 신탁통치 문제를 둘러싸고 국가적으로 가장 중대한 이 시국에 씨와 같은 민족적 투사가 서거한 것은 본당의 일대 손실일 뿐 아니라 조선 국가로서도 보아 중대한 손실이다.

씨는 일생을 통한 민족투쟁 장리에 있어 일즉 금일이 있을 것을 각오치 않았던 바 아니겠지만 본당으로서 이 것이 첫 희생인 만큼 가장 애석히 여기고 비통히 생각하는 바다. 본당은 씨의 유지를 계승하여 조선 완전독립 신탁통치의 절대배격 일로로 매진하기를 맹세한다.” 金俊淵, 『韓國民主黨小史』, 24-25쪽.